

부도사태 1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도매상 연쇄부도의 흑안이 출판계를 휩쓸지도 벌써 일년이 지났다. 유통대란이 터지자 공멸의 위기의식을 느낀 출판계는 지식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동서분주했다. 정부에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호소하는 한편 유통체계를 혁신하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부도사태에 따른 고통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는 지금 혁신의 목소리는 가물거린다.

유통업계의 판도 ▶

한국·송인·학원의 삼각구도 재편

현재 출판유통업계 판도는 대체로 유통대란 이전과 비슷하게 재편됐다. 월매출 55~20억원을 올려 시장 전체의 31% 정도를 차지한 한국출판유통·송인서적·학원서적 등의 삼각구도로 자리잡은 듯하다. 변화된 것은 한국출판유통이 보문당 위치로 올라선 것과 부도난 송인서적이 부채 70%를 변제하고 예년 수준으로 가동되는 것. 그러나 시장구도 재편에 변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업계 3위였던 고려북스가 부채 40%를 탕감받아 동국출판판매(주)로 출범하여 업무를 재개했고, 보문당 인수를 표명하며 출범한 세종출판유통(주)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유통업계가 재편되기까지 출판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도매상이 부도날 때마다 채권단이 구성되고, 대책마련을 위한 연석회의가 이어졌다. 그 중에 단연 출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보문당 대표와 채권단의 힘겨루기. 결국 출판인 201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고소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연쇄부도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판계는 유통발전 세미나 등을 열어 유통망을 정비하자고 외쳤다. 부도난 업체를

합병하는 안이 대두됐는가 하면 현대화·전산화 구축하자는 목소리도 들렸다. 서점의 대형화와 체인화를 모색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점점 목소리는 분산되기 시작했다. 결과는 보문당을 제외한 기존 업체가 다시 시장을 장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판사 대표는 “도매상 난립과 과당경쟁이 출판계의 부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계 스스로 다시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이는 이익을 앞세운 자사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당시 대다수 출판인이 한목소리를 내어 외쳤던 소리는 유통망 현대화·전산화의 구축. 문예진흥기금 200억원이 이자율 6%에 긴급 수혈된 것도 이 때문이다. 출판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자금은 한국출판유통에 90억원, 출판협동조합에 60억원이 배정됐다. 어쨌든 범출판계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 출판계는 스스로 ‘반세기 숙원사업’이라고 외친 현대화·전산화 구축을 개별 업체의 몫으로 떠넘긴 셈이다.

거래관행 ▶

중복·어음거래 등 과거관행 그대로

유통대란이 지속되는 동안 출판사 1천여



개와 서점 1천5백여개가 사라졌다. 부도사태로 내환을 겪은 출판계는 골깊은 생채기를 뜯게 됐지만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은 달라진 것이 없다. 편중된 영업,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시스템, 어음거래 등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유통발전위원회(위원장 이승용)는 최근 한 보고서에 “도매상이 아직도 베스트셀러 위주의 편중된 영업행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래 편중된 영업행위는 밀어내기식 폐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구색을 갖출 수 없는 서점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복거래의 관행도 여전히 그대로 분석했다. 지방서점의 대부분은 3개 이상의 유통업체와 중복 거래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매상의 수금율이 10%대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통대란이 벌어진 당시 수금율이 10%대로 떨어진 도매상은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일부 출판인들이 2차 부도사태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복거래는 곧 반품 확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반품도서 관리시스템도 개선된 것이 없다. 몇몇 도매상은 반품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한다. 최근 한 출판사 대표는 어느 유통업체 대표와 마주한 자리에서 “서점에서 반품을 확인한 도서를 도매상이 다시 주문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반품도서를 제대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결제관행도 예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적거래가 위탁판매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음거래의 비중이 높을수록 출판계

는 다시 위기에 직면할 공간이 크다. 그러나 도매상은 여전히 4개월짜리 어음을 지불하고 있다. 부도사태 이후 한국출판유통과 송인서적이 현금 결제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허창성 대표는 “6월 이후에 90일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매질한 도서를 반품하는 경우와 도서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문제. 이승용 위원장은 “유통업체의 저마진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나머지는 과거관행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화 ▶

전산망·사전주문제 등으로 가시화

얼마전 세계 최대의 도서통신판매회사인 베텔스만이 할인판매를 위한 공격적인 회원모집으로 거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다빈치·부꾸 등 인터넷서점업체도 등장해 기존 유통업계는 대격변의 위기에 직면했다. 바야흐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변신을 위한 유통업계의 노력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전산망 구축, 사전주문제 도입, 유통환경표준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등. 한편, 일원화 공급 확대와 악성거래처 정리도 눈에 띈다.

한국출판유통은 조선 인터넷 TV를 이용해 도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컴퓨터나 TV에 장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홈페이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점주문·주

“학술전문서 출판 중단 위기” 선언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강희일 회장

<98년 도매상 부도사태 이후 일지>

98. 1. 31 송인서적 부도
2. 11 정부, 출판계 긴급자금 2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 발표
2. 12 범출판계, 도서유통 특별위원회 개최
2. 28 보문당 부도
2. 4 송인서적 채권단 회의
2. 7 출판계, 새 대통령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
2. 9 출판계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회의
3. 17 고려북스 부도
3. 17 청와대 출판계 500억원 지원 발표
3. 2 보문당 채권단 대책회의
3. 3 문화부, 출판계 회생위한 지원 청와대에 건의
3. 7 출판인 201명, 보문당 이창섭 대표 고소고발장 법원 접수
4. 16 문예진흥기금 200억원 한일은행 예치
4. 23 송인서적, 자구안 발표
4. 24 고려북스, 동국출판판매(주) 설립 표명
4. 29 양서출판 지원 위한 300억원 조성 국민은행과 협의
5. 20 송인서적, 한고서적 합병
6. 17 출협, 유통발전세미나 개최
6. 23 200억원 기운데 한국출판유통 90억원·출판협동조합 60억원 융자지원 결정
7. 13 300억원 111개사에 양서출판 융자지원 결정
7. 1 송인서적, 1차 변제(25억원) 시작
8. 1 한국출판유통, 한양과 합병 선언
9. 28 출협, 500억원 관련 경과보고
10. 22 출판인회의(가칭), 유통·송인·학원 대표와 함께 유통발전세미나 개최
11. 2 한국출판인회의 출범
12. 28 문예진흥기금 50억원 양서출판 융자지원 결정
12. 8 세종출판유통(주) 출범
99. 1. 22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유통 방문회의 개최
2. 4 송인서적, 2차 변제계획 발표

문항목·주문서·발주·재고·베스트셀러 등의 내용을 원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즉, 출판사는 자사 도서의 유통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서점은 편리하게 도서를 주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허창성 대표는 “시스템을 갖추면 도서유통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인서적은 홍보지 ‘송인서적’을 통해 사전주문제를 시행한다. 출판사측에서 보면 출판예고제인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22일, 출판인회의 유통발전위원회와 한국출판유통·송인서적·학원서적 대표가 모여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사항. 이규영 대표는 “출간에 정인 도서정보를 서점에 제공하면 판매에 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또다른 방법으로 주·월 또는 분기·연간 베스트셀러를 활용하기도 한다. 송인서적은 격주간 소식지에 ‘베스트셀러 200’을 게재한다. 학원서적은 주간위 ‘베스트셀러 100’과 월·분기·연간 베스트셀러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목록은 서점영업에 응용되고 있다.

유통대란 이후 위험 줄이기에 나선 몇몇 출판사들이 일원화 공급을 추진했다. 일원화는 도서의 중복·과다유출을 지양하려는 대안으로 나왔다. 일원화 공급을 하고 있는 청년사 정성현 대표는 “일원화로 출판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도서보급이 지역별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평가했다. 일원화 공급을 하지 않은 출판사도 도매상 거래처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업체도 악성거래처 정리에 나섰다. 송인서적 이규영 대표는 “수급율이 30%를 밑도는 악성거래처를 대폭 정리를 줄이고 있다.

유통업체의 변화와 함께 유통표준화를 정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유통발전위원회는 지방 8대서점을 시작으로 한국출판유통, 송인서적 등을 방문하여 유통표준화 도입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유통회사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오완진 기자

“불법 무단복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적자출혈에 출판사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희일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회장의 격앙된 목소리에는 IMF 체제 이후 불황기를 어렵게 버텨온 전문출판사가 겪고 있는 이중의 고달픔이 배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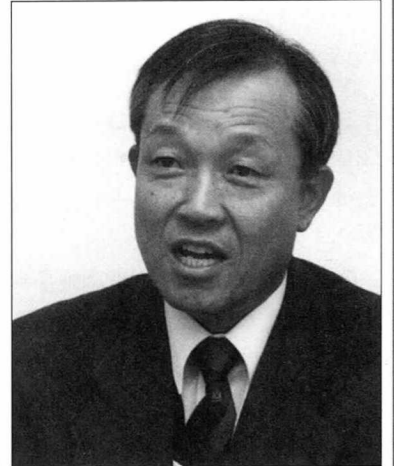
지난 1월21일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회원사 40여 출판인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난무하는 도서의 불법 무단복사·복제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학술전문도서 출판 중단 위기’를 선언했다. 대학가의 불법 복제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의 조사결과(1995)에 따르면 대학생의 92.4%가 일상적으로 무단복사 복제를 하고 있으며, 77.5%가 불법복사본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가마다 복사집이 10여군데 이상 난립해 있고, 대학 구내복사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단과대별로 체인화·기업화됐을 정도로 공공연해 대학당국이 은근히 불법복사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100부 정도 출고하면 2, 3부 팔리고 전부 반품돼오는 현실에서 어떻게 더이상 전문서출판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3월에는 전국 법원의 검찰지청장 앞으로 공문을 띄워 불법복사에 대한 강력 단속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동부지청장 지시로 특별검사 진두지휘 아래 수사관 2명과 함께 24시간 단속한 결과, 10건을 잡았지만, 결국 모두 약식기소에 10만원 벌금형을 무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 말았다. 그만큼 단속도 어렵고, 벌칙이 약해 단속효과도 없다는 것이 강희일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는 정부당국에 ▲불법출판과 불법 무단복사·복제에 대응할 수 있는 판권권, 출판권 보호조항을 저

“불법 무단복사로 인한 적자출혈로 전문출판사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희일 회장.

작권법상에 신설할 것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 지도 감독 금지조치 등과 같은 수준의 ‘준사법권제도’ 조항을 마련, 관련대표 단체차원의 보호 단속권한을 줄 것 ▲사적 복제 보상금제도 도입의 보완책으로 준사법권제도를 조기정착할 것 ▲불법 복사복제에 대한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할 것 ▲침체 고소제기에 일선기관이 적극 대처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지난 1월27일에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회장 유광중)·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회장 김기찬)·학술자료협회(회장 최락춘) 등 관련협의회와 단행본 출판사 등이 모여 출협 집행부에 이 제안을 제출했다. 이날 현 출협의 단속요원을 정년퇴임한 경찰청 출신 요원으로 교체, 더욱 강력 단속할 것과 일간지 등에 광고문 게재를 위한 홍보비용을 각 협의회 회원사들이 모금할 것 등을 결의했다. 전국 대학가 서점과 대학 구내서점 등도 공조할 예정이며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는 회원서점에 ‘무단복사 복제행위 고발센터’ 스티커를 붙이고,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박기봉)은 거래서점을 통해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대학교재가 두고두고 볼 만한 책이 아니라 비판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도 있습니다. 다만 죄의식도 전혀 없이 책 한권을 고스란히 복사하고, 책도독은 도둑도 아니라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희일 회장의 말은 3월 신학기를 앞둔 학술전문 출판사들의 절박한 상황을 강변하고 있다.

— 김지원 기자